

취/재/요/청/서

| | |
|-------|--|
| 수 신 | : 언론사 사회부 |
| 발 신 | :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
| 제 목 | : [취재요청서] 7월 19일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 청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촉구 인권단체 및 재심 청구 변호인단 기자회견 |
| 발 신 일 | : 2019년 7월 18일(목) |
| 문 의 |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 박진(다산인권센터) |

정의는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 청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7월 19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전국 49개 인권단체),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 청구 변호인단
- 기자회견 안
 - 재심 청구 변호인단 발언
 - 인권단체 발언
 - 당사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인권위 의견서 접수 및 면담 신청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2013년 8월 국정원에 의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등장으로 한국사회에는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종북몰이 공안탄압 광풍의 시작이기도 했던 이 사건은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로 집권 초기부터 위기에 봉착했던 박근혜 청와대에 세태를 전환시킬 카드가 되었습니다. 1980년 이후 33년 만에 ‘내란음모’라는 단어를 등장시키

며 압수수색, 녹취록 공개, 체포 및 구속, 정당해산 청구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공안통치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7명에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3.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6명은 만기 출소하고,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양승태 대법원이 꼽은 재판거래 대상에 내란음모 조작사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 지난 6월 5일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7명의 피해자들이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재노36, 제4형사부) 2018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사건 재심제도가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에게 정책 개선에 대한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사법적 구제절차인 재심제도에 따른 재심 청구권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심 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인권단체들은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인권침해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는 2013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북몰이 공안탄압 광풍은 수없이 많은 경계를 만들어내고 자기검열의 기제로 작동해왔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2013년 봄 최악으로 치달던 남북관계도 변화했습니다. 과거 술한 간첩 제조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온 공안기구들에 대해 개혁 요구가 드높지만, 여전히 제자리만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뒤흔들어온 공안통치의 흔적을 다시금 추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2019년 7월 19일(금) 오전 11시, 인권단체와 재심 청구 변호인단이 함께 모여 “정 의는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제목으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 청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정의는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 청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을 요청하며

2013년 8월 28일 새벽, 33년 만에 언론에 등장한 ‘내란’이란 두 글자는 우리 사회 전체를 얼어붙게 하였다. ‘내란’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엄청난 위협 앞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공포는 사건의 내용을 기획하고 확산시킨 국정원과 국가에 의해 조성되었다.

당시 사건은 피고인들이 하지도 않은 발언과 행위를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전파되었다. ‘전쟁을 준비하자’, ‘성전수행’이라는 발언에서부터, 북 잠수함 지원방안이 담긴 이메일 등 북한과의 연계와 폭발물 제조법이 담긴 파일이 있다는 것까지, 이러한 국정원발 언론 기사를 보면 여지없는 내란음모 사건이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이 모든 것은 실체적 진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전 의원에게는 ‘내란 선동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9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로 여섯 명의 피고인들은 함께 20년의 징역형을 모두 마치고 만기출소 하였고 이 전 의원은 6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구금되어 있다. 재판 이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기획으로부터 시작해, 수사단계,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형 선고에 이르기까지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들의 ‘인권’이 사라진 사건이라 불리도 무방하다. 인권단체들은 2014년 2월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제목의 인권침해보고서를 발표했다. ▲ 압수수색 과정의 인권침해 ▲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 가정·직장·생계 등 생활상의 변화와 트라우마 ▲ 사회적 배제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결말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국가기관의 언론공작과 재판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현재까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내란음모 사건 ‘조작’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은 2019년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재노36, 제4형사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라도 재심 절차에서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에 해당하는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재심 청구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한 재심인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끝)

2019년 7월 19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 청구 변호인단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국 49개 인권단체)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